

특집: 한국의 동남아 연구와 교육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전 제 성 · 이 재 현*

I. 머리말

지역연구(area studies)를 발전시키려면 지역전문가들을 육성해야 하고, 지역전문가들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수행되는 지역연구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지역연구자의 소명이 지역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의 명맥을 이어갈 후배들을 만드는 일이라면 교육과정은 지역연구자 자신의 가치실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의 지역연구 교육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지역연구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토론의 촉발을 목적으로 동남아학의 교육현황과 후속세대 육성모델을 사례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동남아학의 교육과정을 사례로 삼은 이유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 전제성(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연세대 정치외교학과 BK21 박사후과정 연구원). 이 논문은 호남국제정치학회추계학술회의(2006.11.24. 전북대), 한국국제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2006.12.02 외교안보연구원), 한국동남아학회추계학술대회(2007.10.27. 서울대) 등 세 번의 발표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그 동안 격려하고 조언해준 분들과 심사자 분들께 감사한다.

말레이시아를 전문으로 하는 동남아지역연구자여서 직업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내부 사정을 상대적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남아학의 경우가 다른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이고 지역연구 교육과정 일반에 관심을 갖는 정부기관이나 재단의 관계자들도 관심을 끌만한 사례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선, 동남아 지역연구는 한국에서 국가적인 필요나 사회적인 수요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를 전공하는 지역연구자가 보잘 것 없는 증가추이를 보이는 역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만한 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전문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지역연구 육성책의 모순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동남아연구의 경우는 연구자들이 대학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집단적인 노력을 십여 년간 전개한 비상한 사례로서 폭넓은 관심을 끌만 하다. 우리는 이를 지역연구자 육성을 위한 ‘동남아학계모델’이라고 부르면서, 모델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지역연구 관련자들의 관심과 토론, 응용을 기대한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동남아지역연구의 중요성이 연구자의 두드러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소개한다. 이 장은 동남아지역연구자가 아닌 독자들을 감안한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동남아연구자들은 III장부터 읽기를 권한다. III장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의 동남아 교과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문제를 지적한다. 과목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대학의 웹사이트 조사를 기본으로 삼고 전화인터뷰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우리는 동남아 강좌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학문분야별 분절성과 지리적 편중성도 함께 제기하며, 지역연구 교육과정에 있어서 국제대학원의 ‘악순환’과 궁극적 파산에 관한 답답한 이야기를 토로한다. IV장과 V장은 지역연구후속세대 육성전략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우

리는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 10년 이상 한국동남아학회와 한국동남아연구소(과거의 동남아지역연구회)가 추진해온 후속세대육성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한국과 동남아연구: 연구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희소성

지역연구는 일반적으로 해외지역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합리적인 외교정책과 무역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자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사회의 자민족중심주의 극복과 국제적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학문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지역연구는 추상적인 이론과 모델을 구체적인 지역적 맥락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수정을 가하거나 결정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가설의 확정 또는 부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심대한 가치를 지닌다.¹⁾

한국은 국가적인 존망을 외교와 무역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사회의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하고 해외지역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대외종속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연구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

1) 정치학에서 외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비교정치학분야는 지역연구를 중시해왔다. 비교정치연구에서 직면하는 “과다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서 다수의 공통변수를 상수화할 수 있는 지역연구가 권장되었고(Lijphart 1995), 비교연구의 과정에서 개념의 확장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연구전략으로 제안된 중범위 연구도 지역연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Sartori 1995). 그러나 지역연구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를테면 미국정치학회장 로버트 베이츠(Robert Bates 1997)가 지역연구자들이 정치학도들을 망친다면서 정치학의 일반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학습을 강화할 것을 학과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곧 아시아연구자의 반비판에 직면하였다.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1997)은 베이츠의 주장이 영미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탄생하고 적용된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설들과 정치학의 경제수학화를 추구하는 편협한 방법론으로 현실세계를 재단함으로써 정치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태도라면서, “이론은 싸고 데이터는 비싼 법”이고, “비교정치학의 발전은 지역연구자들의 업적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루시안 파이(Lucian W. Pye 2001)도 아시아지역연구가 정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다. 특히 동남아 지역연구는 한국에서 각별한 중요성을 지니는데 이제부터 그 실천적, 학술적 중요성을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 이야기해보겠다.

1. 동남아연구의 중요성

(1) 경제적 중요성

동남아 지역연구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동남아가 경제적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과 동남아의 무역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우리에게 제5위의 교역대상이었고 우리는 아세안에게 6위의 교역국이었다. 더구나 양자간 무역은 비대칭적이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에게 긴요한 천연자원이 수입되고 우리의 제조업상품이 수출되고 있어서 내용상 상보적이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이루어왔다(신운환 2008a). 최근에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문화산업 상품들까지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다. 물자와 상품의 이동은 단순 경제적인 흐름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흐름이고 외교관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학제적인 지역연구를 필요로 한다.

동남아는 또한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지역이다. 한국인 해외투자에 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투자건수 면에서 한국의 4대투자국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이고, ASEAN 10개국에 대한 한국인 투자는 2006년 6월말에 신고기준으로 4,226건으로 약 141억불에 달했다(한국수출입은행 2006). 한국인 투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국의 정치, 노동, 환경, 인권, 문화갈등과 결부되는 만큼 지역연구자의 조언과 비판을 필요로 한다.

무역과 투자에 더하여 최근에 부각되는 경제적 사안은 한국의 공

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관한 것이다.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외적 압력과 대내적 열망에 근거하여 한국정부는 해외원조를 증편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05년 말에 재정부는 58개 ODA 전략대상국을 발표하고 그 중에서 동남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2006). 그런데 ODA는 단순한 나눠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성, 책임성, 투명성, 인본성의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무역과 투자 문제처럼 ODA 역시 지역연구와 연관성이 높은 사안이 되고 있다.

무역, 투자, 원조를 통한 연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의 경제사적 궤적의 부분적 유사성에 또한 주목해야 한다. 한국과 동남아의 자본주의경제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릴만한 “급속하고 공유된 성장”(rapid and shared growth)을 보여주었고 극적인 경제위기도 함께 맞이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Islam and Chowdhury 2000). 따라서 성장, 위기, 극복의 변인과 과정에 관한 우리의 비교연구 사례로서 동남아의 학술적 가치가 심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외교적 중요성

한국에서 동남아에 관하여 경제적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많아도 외교적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드물다. 동남아의 외교적 중요성은 한국정부가 ‘비동맹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던 시대에는 버마에서 대통령과 측근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근자에는 상당한 외교적 해안을 가진 이들을 제외하고는 부연 설명 없이 동남아의 외교적 중요성을 상상하지 못하며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동남아의 외교적 중요성은 지구적 차원이나 양국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에서

도 찾아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동아시아외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동북아중심주의자들’까지도 인정하듯이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는 민족주의적 대결로 지역협력의 심화가 어렵고, 그렇다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능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ASEAN이 한편으로는 지역협력의 매개적 중심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의 패권을 거부하는 연대세력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ASEAN은 일찍이 아시아 유일의 상설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창설하고 주관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ASEAN+3(한, 중, 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상급, 장관급, 차관급, 실무자간 회의를 연중 50차례나 개최하는 제도화를 달성하였으며, 2000년에 통화스왑협정을 제안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를 통하여 외환위기에 대한 동아시아적 차원의 자구책을 추진하였고, 2005년부터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개최하는 등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중심축이자 ‘추동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동아시아외교는 ASEA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만 효과적일 수 있다(신윤환 2008a; 박사명 2006). 학술적으로도 아세안 지역협력의 동아시아적 확장은 국제관계론, 특히 구성주의적 접근법의 중요한 연구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Nabers 2003).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은 아니지만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강대국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김대중 정권 시기에 입증된바 있다. 경제위기를 겪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정부가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1999년)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 2000년)의 설립을 제안하고 2002년에 구체적인 26개 실행프

로그그램을 산출하는 지역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이재현 2007).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ASEAN을 중시하고 그들과 협력한 결과였다.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동아시아 외교에서 연성파워(soft power)를 지향해야 한다. 연성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에 근거하여 상생의 비전과 중재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혜로부터 생성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상충하는 이익 갈등의 능숙한 조정이라는 것은 관계 당사자들의 회구, 동기, 사고방식, 행동패턴, 당면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연성파워의 형성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도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려고 들지 않는 이를 ‘믿을 만한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남아 지역연구는 한국 외교의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점하게 된다.

동남아는 중앙정부의 외교전략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국제화 혹은 ‘지방외교’(장세길 2008)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세방화’(glocalization)를 모토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 지방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1990년대에 이후 결연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매결연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 범위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심에서 확대되어 동남아 지역과의 자매결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의 지자체간 자매결연은 베트남과 16건으로 가장 많으며, 인도네시아와 10건, 필리핀과 7건, 캄보디아와 2건, 말레이시아와 1건을 체결하고 있다.²⁾ 지방정치 차원의

2) 1961년 2건으로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는데, 1989년까지 누계로 86건에 불과했던 자매결연은 1990년대에 만 266건, 2000년대에는 6년간 총 155건의 자매결연이 맺어졌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2006)의 보고에 의하면 16개 광역단체 전부, 234개 기초단체 중 71.4%에 달하는 167개 기초단체가 외국의 도시나 지방과 하나 이상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전체 건수는 2006년 현재 507건에 달한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동남아의 지방과 맺은 결연 수는 모두 36건으로 7%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

한국과 동남아 교류증대는 동남아 현지에 관한 지식의 지방적 수요 증대를 의미한다. 결연을 성사시키고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 현지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 동기로 추동되는 ‘발전주의 적 지방교류’가 동남아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인들이 노정했던 것과 유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현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중요성

동남아는 국가 이익이나 상업적 관심사를 넘어서는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주로 ‘인간의 이동’에 기인한다. 2006년의 경우에 한 해 동안 동남아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3백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을 방문하는 동남아인들은 낮게 잡아도 7십만 명을 넘어섰다(Park 2008: 11). 더욱 중요한 요인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동남아인들의 한국 진출이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다문화적 전환’을 요청받기 시작했다.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자본주의 재생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과 합법 체류의 경우를 모두 합해 중국인(한국계 포함)이 가장 많고, 베트남인, 필리핀인, 태국인, 인도네시아인 등의 순으로 동남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이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27.53%를 차지한다(법무부 2007).

동남아 출신 국제결혼이주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역시 법무부의 2007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총 110,362명인데, 그 중에서 동남아출신여성은 30,375명으로 전체의 27.52%를 차지한다(법무부 2007).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메단(Medan)시의 고색 창연한 도시에 한 곳이 광주 거리(Jalan Kwangju)로 명명되었고 광주가 이에 화답하여 시내에 메단 거리를 만드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다.

2005년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는 중국 국적이 가장 많았지만, 베트남 신부가 두 번째, 필리핀 신부가 다섯 번째, 태국 신부가 여덟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베트남 신부의 경우 이전년도 대비 136.5% 증가하여 34.8% 증가한 우즈베키스탄 신부와 11.4% 증가한 중국인 신부를 훨씬 앞질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동남아 신부들은 결혼(2001-03년) 대비 분만(2003-05년) 건수 비율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신부가 94.2%로 1위, 필리핀 신부가 85%로 2위, 태국이 54.2%로 3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신부는 15.9%로 꼴찌에 기록되었다.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도 2007년에는 베트남 신부의 자녀출산건수가 중국인 신부의 경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김춘진 2006).

국제결혼은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국민통합(시민권)과 자녀양육(사회화)에 관한 이차적 과제를 우리 사회에 안겨준다. 한국 정부와 사회단체들은 그간에 주로 동남아 사람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해결하려 했으나 이러한 처방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전제성 2008). ‘우리 안의 동남아’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신부 현상은 한국사회가 동남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 다문화주의’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적지 않은 수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시아연대’를 국제 활동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삼기 시작하였으며 아시아 내에서도 핵심적 네트워크 지역으로 동남아를 꼽고 있다(전제성 2006a). 한국 시민사회의 이러한 연대활동은 민주주의와

3) 포용적 다문화주의(inclusive multiculturalism)는 어느 일방의 문화적 정체성이 희생당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특징들이 공존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로 유입되는 다른 문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국제결혼여성 문제에 관한 연구자들은 갈등요인으로서 언어소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과 성차(gender)에 관한 문화적 인식차이를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서 지역연구의 성과에 입각한 관련자 이해교육이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김이선 2007).

인권상황에 관한 동남아전문가의 연구와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몇몇 전문가들이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 그러므로 동남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연구와 교육은 연구자로서 본 연의 학술적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실천적 요청에 부응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⁴⁾

2. 한국의 동남아 지역전문가 및 연구 현황

한국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는 실천적 학술적 수요가 광대하지만 전문가의 규모나 연구의 양적 축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현재 한국에서 현재 활동하는 동남아전문가의 수는 적게는 63명, 많게 잡아도 100여명에 불과하다.⁵⁾ 물론 한국의 해외지역연구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동남아연구가 시작되고 동남아연구자들도 꾸준히 증가하여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강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박승우 2008). 우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국내외에서 동남아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신진연구자가 41명이나 추가된 것으로 추산한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에 중국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국내에서만 876편이나 집필된 데 비하면(김도희 2006), 동남아연구자는 조출한 증가추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정체감을 피할 수 없다.

4) 동남아는 정치사회학과 정치인류학 분야에서 후견-추종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 온정주의(paternalism), 도덕경제(moral economy)나 공동체주의에 관한 정치문화연구(Scott 2004),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혼종체제(hybrid regimes)에 관한 연구(Diamond 2002), 경제변동-계급형성-정치변동 관계의 다양한 편차에 관한 연구(Crouch 1985; Jones 1997)를 자극한다.

5) 우리는 이 논문의 발표 당시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정보에 나타난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동남아전문가를 63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박승우 교수(2008)는 학위논문 작성 이후의 논문발표까지 포함하여 한국의 동남아전문가를 100여 명으로 추산하였다.

동남아전문가를 전공국가별로 나눠보자면,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최대의 군도국가이며 외교 강국이고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도 깊은 인도네시아에 관한 연구는 12명(많게는 15명)이 책임지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관하여 유사한 규모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싱가포르에 대한 연구는 경제력에 어울리지 않게 희소하고,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등 동남아 약소국에 관한 전문가는 전무하다. 학문분야별로 보자면, 정치학자가 가장 많고 인류학자가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역사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문학연구자, 국제관계연구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극소수이다(최병욱 2007; 박번순 2007; 김영애 2007; 배궁찬 2007).

연구 성과도 대상국가와 학문분야가 편중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연구』 게재논문을 분석한 [표 1]을 보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을 사례로 다룬 논문의 수가 극히 저조하다. 연구주체도 편중되어 국내정치와

[표 1] 『동남아시아연구』 게재논문의 연구대상국가

	1992-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7	계
베트남	8(30%)	11(22%)	16(20%)	5(21%)	40(22%)
태국	3(11%)	10(20%)	18(22%)	3(13%)	34(19%)
인도네시아	5(19%)	10(20%)	12(15%)	5(21%)	32(18%)
필리핀	7(26%)	8(16%)	10(13%)	3(13%)	28(16%)
말레이시아	1(4%)	4(8%)	14(18%)	4(17%)	23(13%)
싱가포르	2(7%)	2(4%)	5(10%)	1(4%)	10(5%)
미얀마	0(0%)	2(4%)	3(4%)	1(4%)	6(3%)
캄보디아	1(4%)	1(2%)	1(1%)	2(4%)	5(3%)
라오스	0	1(2%)	0	0	1(.5%)
브루나이	0	0	0	0	0
동티모르	0	0	0	0	0
계	27(100%)	49(100%)	79(100%)	24(100%)	179(100%)

출처: 『동남아시아연구』 1-17권 2호. 비교연구는 사례 국가에 각 1건씩 기록하고 일반연구는 배제.

경제연구가 4분의 1씩 차지하지만, 사회학과 역사학 논문은 드물고, 어문학 분야는 심각할 정도로 희귀하다(전제성 2006b: 표4).

동남아학계는 연구자의 희소성과 연구 성과의 편중으로 인해 대학, 분과학회, 정부기관, 재단,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계 내에서 연구의 수준을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토론자, 심사자, 조연자, 공동연구자를 구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동남아 연구의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학계 연구 활동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도 연구자의 양적 증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대학의 동남아 교육 현황 분석

우리는 한국에서 동남아지역연구자들의 배출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로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문제 삼고자 한다. 물론 초중고 교 교육과정의 편협성, 강대국 중심의 언론보도, 강국 중심의 정부외 교 및 대학원생들의 의식세계 등 여러 요인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지역전문가 육성의 최종적 기관은 대학이며 우리도 책임이 있는 관계자라는 점 때문에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중심 의제로 삼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학부와 대학원의 동남아 관련 강좌 현황을 제시한다.

[표 2] 주요 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의 동남아 교과목 개설현황⁶⁾

구분	학교명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언어 문학		계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국립대	강원대		1	1	1			3
	경북대			1				1
	경상대	1	1					2
	목포대			1				1
	부산대		1		1			2
	서울대			3	2	1		6
	창원대	1						1
	소계	2	3	6	4	1		16
사립대	경희대	1						1
	고려대			2				2
	동국대	1						1
	대구가대	1						1
	동아대	1						1
	상명대	1						1
	서강대	1	1					2
	성신여대	1	1					2
	숙명여대	1						1
	아세아연합대			1				1
	아주대	1						1
	연세대	3	2					5
	인하대	1		1				2
	조선대	1						2
	우송대	3		2		24		27
	청운대	4		9		32		45
	영산대	13		6		41		60
	부산외대	8	1	23	1	97		130
한국외대	10	8	23	5	91	10	147	
소계	52	13	67	6	285	10	432	
계	54	16	73	10	286	10	448	

6) 과목개설현황은 2006년에 한국외대 석사과정생 오선주씨가 학과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고 필자들이 몇몇 학자들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보강한 것인데, 일부 대학에 국한하여 대강의 추이를 보여줄 뿐이지 완벽한 집계는 아니다.

1. 동남아 강좌 지형도: 희소성, 분절성, 편중성

(1) 동남아 강좌의 희소성

대학의 동남아 교육과정에 관하여 가장 먼저 지적할 점은 동남아 관련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대학이 다수이고 개설하더라도 대부분 극소수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의 동남아강좌는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희미한 등대처럼 적적하기 이를 데 없다. 사립대의 경우도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영산대, 청운대, 우송대 등 동남아 관련 학과를 보유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동남아과목이 일부대학에서만 한 두 과목 개설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관련 학과를 보유한 다섯 개 사립대 중에서도 대학원에 동남아 과목을 3개 이상 개설한 학교는 한국외국어대뿐이다. 동남아 강좌가 희소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남아 관련 학과가 드물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년 집계에 따르면 중국관련 학과가 190개, 일본관련 학과가 168개인데, 동남아 관련 학과는 11개에 불과하다(Park 2008). 동남아 관련 전공을 개설하지 않은 대학이나 인문사회과학 관련 학과에서 동남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는 동남아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요원이 없기 때문이다.⁷⁾

(2) 동남아 교육의 분절성

분야별 강좌 수를 비교해보면 어문학 분야의 과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역사와 문화 분야이고, 정치와 경제 분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동남아 관련 학과를 보유한 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강좌분포를 보면 정치와 경제 분야가 역사와 문

7) 강좌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동남아 전문가가 희소하기 때문에 동남아 강의를 담당할 외부강사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논문의 공동필자인 이재현은 2007년 한 해 동안 동남아관련 일곱 개 과목의 강의를 의뢰받았지만, 이 중에서 네 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화 분야를 앞서고 어문학 분야의 강좌는 서울대 학부에서 개설한 인도네시아어 1개 강좌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이는 곧 한국 동남아 교육의 ‘분단’ 현상을 보여준다. 즉 한편에는 학과를 보유한 대학의 어문학(사실상 어학) 중심 교육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학과가 없는 대학의 정치경제(사실상 정치학) 중심의 교육으로 분단되는 현상이다.⁸⁾ 이러한 분단은 지역연구후속세대를 육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어학 교육이 부재한 대학에서는 현지어 학습기회가 없고 동남아 연구 지망생도 희귀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동남아 관련 학과들은 해마다 동남아로 인생을 거는 진취적인 신입생들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지역연구자들을 육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다가 한국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학부 중심이므로 지역연구 후속세대 육성에 있어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기 어렵다.

(3) 동남아 언어교육의 편중성

소수의 대학에서 수행되는 동남아 언어 교육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한국외대에서 개설하는 언어강좌는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뿐이고, 미얀마어 강좌는 부산외대에서만 개설된다.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등 동남아의 다른 언어강좌들은 상시적으로 개설되지 않고 있다. 동남아 관련 학과들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미얀마어과처럼 각 국어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언어 교육의 적지 않은 틈새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동남아 언어강좌의 지리적 편중성도 문제이다. 가장 형편이 나은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는 서울, 용인, 대전, 부산에만 개설되어 있어서 강원, 경북, 호

8) 동남아언어강좌를 개설한 한국외대, 부산외대, 청운대, 영산대의 12개 학과의 교수요원 대부분이 한국외대 출신이다(Shin and Hwang 2004). 따라서 동남아 교육의 균열은 ‘한국외대’와 ‘비외대’ 사이의 균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남, 제주권의 학생들은 수강하기 어렵다. 태국어는 이보다 수강 조건이 더 열악하고, 미얀마어를 수강하는 방법은 부산에 가서 사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동남아연구를 지망하는 한국동남아연구소 대학원생 회원 중에서 현지어를 국내기관에서 배운 경우는 21%에 불과하다(정유경·이창규 2007).

2. 국제대학원의 실패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처럼 보였던 것이 국제대학원이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제적 협력을 통한 지역 전문가 육성의 최대 전기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세계화’ 정책에 입각한 국제대학원 창설 지원으로 마련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강대국 연구를 예외로 한다면 국제대학원의 지역연구 프로그램은 대부분 파산하고 말았다. 지난 10년간의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한국형 지역연구자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동남아 프로그램의 전반적 파산

김영삼 정부는 1997년에 5년간 천억 원을 투자하여 9개 국제대학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각 대학들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자금을 조성할 것이 요구되어 총 2천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러나 10년 뒤에 이 9개 국제대학원 대부분에서 지역연구의 전반적 퇴진이 확인하고 동남아연구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부분 실종되었다. [표 3]에 제시한 국제대학원의 전공과정을 보면 국제통상, 국제협력, 한국학의 비중이 높고 지역연구는 없어졌거나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아시아에 관한 지역연구과정을 운영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전공 중심이다. 한국외국어대만이 남아시아와 동남아를 합

쳐서 동남아전공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은 국제대학원 중에서 단 한 곳도 동남아전공으로 전임 교수를 고용한 곳이 없다.

[표 3] 정부지원을 받은 국제대학원의 전공과정

국제대학원	전공과정	비고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남미학, 국제무역-경제협력, 국제 business, 국제관계, 한국학	지역연구는 남미만 별개의 전공으로 인정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 국제금융, 국제 e-commerce, 국제기구, 국제안보, 한국학	지역연구과정 부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동아시아지역학(한국학포함), 국제관계, 국제무역, 국제금융	동아시아지역학은 중국과 일본 중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역연구, 국제경영, 국제협력, 한국학	아시아 지역연구는 중국과 일본 중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역연구, 국제무역-금융, 국제협력과정, 국제경영, 한국학	지역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무역, 국제경영, 발전과 협력, 외교와 안보, 한국학	지역연구 과정 부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국제경영-금융, 국제문제-무역 전공), 통역과정	지역연구 과정 부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과, 한국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정치, 국제통상, 비교사회문화 전공)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 전공 통합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러시아학과, 미국학과, 일본학과, 한국학과	4대강국 중심

물론 모든 국제대학원이 지역연구자의 육성을 애초부터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의 초대 원장(유장희 1997)은 날로 심화되는 국제경쟁에 부응하는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제협상’, ‘국제무역’, ‘국제기구’ 전문가 육성을 주창하였고 지역연구는 이에 복무하는 정도로 약소하게 언급할 뿐이었고, 당연한 결과지만 지금까지 동남아전문가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것은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는 지역연구자의 육성을 강조하는 유럽 대학의 프로그램과 꽤나 상이한 것이고, 지역학과 국제학을 타협적으로 결합시켰던 서울대나 한국외대의 프로그램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⁹⁾

(2) 국제대학원의 '악순환'

나름대로 지역연구를 육성해보고자 노력했던 서울대 사례를 통해서 국제대학원의 지역연구 프로그램의 실패 원인을 알아보자. 1997년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국제지역원'이라는 어정쩡한 명칭으로 출범할 때는 동남아 연구과정이 포함되었지만, 2004년에 2개의 동남아 강좌를 끝으로 동남아전공과정이 없어졌다. 당시 한 전임교원은 동남아 연구를 지망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서 프로그램을 없앨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국제대학원의 문제는 학부교육의 문제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앞서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국제대학원의 문제를 단지 학부교육의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 국제대학원의 고유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대학원 지역연구 프로그램의 내실성 부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동남아전공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초창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학기마다 두 강좌 이상의 동남아 과목이 개설되었고, 국제대학원 소속은 아니었지만 인류학, 정치학, 지리학, 동양사학과에 소속된 네 명의 교수가 강의를 책임졌다. 국제대학원의 학생들은 현지어학습비와 현지조사비를 지원받아서 일반 대학원에 속한 지역연구지망생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호조건을 누렸다. 그래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동남아전공에 해마다 대여섯 명씩 입학하였고 그 학생들 중에서 다섯 명이 동남아연구로 박사논문을 썼거나 박사과정 중에 있다. 전문가가 희소한 동남아학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서울대는 동남아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관장할 전임교원을 뽑지 않

9) 영국 대학의 경우에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이념, 문화의 정체성과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이 특정지역 혹은 국가에 대하여 전문가적 소양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었으며 학생들이 "세계적, 국가적, 지역/지방적 차원의 분석 간의 연계성" 속에서 "특정지역과 국가에 대한 연구"를 독자적으로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Gordon 1997).

있고, 학생들에 대한 현지어학습비와 현지조사비 지원을 중단했으며, 중국에는 동남아전공 지원자가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

서울대 사례는 내실성 있는 동남아교육프로그램의 위력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지속되지 않으면 동남아전공 지망자 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만약 정부 지원을 받은 국제대학원들이 건물 짓기 보다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담할 교원 확충에 더 열심히 투자하였다면, 국제통상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전면화하거나 해외교포나 외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쉽고 간편한 길로 매진하지 않고 지역전문가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줄곧 추구했다면, 국제대학원의 동남아프로그램이 요즘처럼 완파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대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주목할 점은 국제대학원에서 동남아 프로그램은 사라졌지만 중국과 일본 연구프로그램은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이로부터 정부의 지역연구 육성책의 전략적 실패를 논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이른바 ‘특수지역’을 전공하겠다는 이들은 원래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적은 수의 지망자들을 적어도 9개 많게는 10여개의 국제대학원에서 나눠 받으면 각 지역별 전공과정을 유지할 만한 학생규모를 갖출 수가 없게 된다. 경작할 수 있는 ‘농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농부’는 많은 꼴이어서, 농부 1인당 수확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¹⁰⁾ 그러니 각 국제대학원에 동남아전공 지망자가 적어서 프로그램을 없애야했고 프로그램이 없으니 전임교원을 뽑을 수 없으며 전임교원이 없으니 학생도 오지 않는다는

10) “빈곤의 공유”로 이어지는 이러한 “내적조밀화”(involution: Geertz 1970) 상황에서 수확량을 보전하는 방법은 생산기술을 진전시키고 비료나 노동 투입을 증대시키는 집약영농 방식이다. 즉 전임교원의 채용이나 현지어학습 및 현지조사 지원제도 같은 방식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국제대학원의 추세는 그 반대였다.

‘국제대학원의 악순환’이 전개된 것이다.

(3) 정부 정책의 전략적 실패

김영삼 정부가 9개 대학에 국제대학원을 설립하게 하고 지원금을 나눠준 정책은 이른바 ‘특수지역’ 혹은 ‘소수지역’에 대한 연구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지 않게 지역전문가를 육성하는 방법은 독자적인 대학원을 보유한 ‘해외지역연구원’을 국립으로 창설하는 것이다. 지역학의 교육과 연구의 단일중심을 설립하였다면 동남아전공 지망자들이 대학별로 나뉘지 않고 적어도 10여 명씩 매년 유입될 것이고, 집중투자 덕분에 학생들은 장학금과 현지조사지원금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전임연구원들과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대학원 지원프로그램이 입안되었을 때부터 이미 지역연구의 중심을 국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속 정권들은 지역 연구자 육성에 관심이 없었거나 오히려 조건을 더 악화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대학원에 지원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이유로 박사과정생 현지조사지원 프로그램까지 중단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보고서 형식으로 건의된 ‘해외지역연구원’ 설립안(이성형·전제성·김용복 2004)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컨대 대학의 동남아 교육과정은 강좌의 희소성, 분절성과 편중성의 문제로 인하여 잠재적인 동남아 지역연구지망생들을 육성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국제대학원의 동남아프로그램은 전반적 파산으로 동남아연구자를 육성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고, 정부의 정책적 보완능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남아연구의 후속세대 창출은 예나 지금이나 동남아학계 스스로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IV. 동남아학계의 후속세대 육성모델

1. 지역연구자의 형성과정

우리는 동남아학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학부와 대학원의 기존 프로그램에 안주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으로는 큰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동남아학계는 대학 단위를 초월하는 독자적인 후속세대 육성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추진해왔다. 필자들은 이를 ‘동남아학계의 육성모델’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장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지역연구자 육성의 단계부터 나름대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지역연구자가 탄생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우리는 관심촉발, 심화학습, 현지조사의 3단계로 나눈다.¹¹⁾ 빠르면 학부과정, 늦으면 대학원과정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관심촉발단계는 강의수강에 따른 동기부여, 체험을 통한 자극, 최소한의 현지어 학습이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2000년대에 출현한 동남아 연구자들과 학도들은 대부분 동남아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했거

11) 요즘 세대의 동남아연구자들은 대체로 우리가 제시한 3단계를 거쳐 지역연구자가 되었기 때문에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연구를 전공하지 않은 학자들, 지역연구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 혹은 지역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의 직원들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하여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연구자(지역전문가)의 정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전문가를 자국의 기업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해결사’나 ‘가이드’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전문가는 자신이 정한 전공분야의 지식을 연마하고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현지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결정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학자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분과중심주의’가 아니라 타학문분야의 지식과 방법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학제성과 유기성을 기본적인 태도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지역전문가는 대학 안팎과 국내외의 지원을 총동원할 때 효과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

나, 동남아여행을 통해 현지문화에 매료되었거나, 현지어학과를 졸업한 경우이다.

두 번째 심화학습단계는 대학원과정에 해당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전공학문분야를 정하고 분과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마하면서 자신이 연구하려는 지역의 사정에 관하여 논문과 자료를 읽는데, 관심분야의 현지어 자료를 독해하기 위한 현지어심화학습도 이 단계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같은 지역이나 국가를 연구하는 다른 분과의 학자나 학생들과 교류함으로써 학제적 소통을 경험하고 지역연구자로서 기풍을 보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 현지조사(field work)단계는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실증적 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에 장기간 체류하는 조사과정을 통하여 현지성, 학제성, 유기성을 지닌 지역연구자로 거듭나는 결정적 단계이다. ‘불의 세레’와 같은 이 단계에서 현지어 능력이 신장되고, 현지인과의 교감과 현지기관 네트워크로 토착적 관점(native point of view)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박사 이후의 지속적인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지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설과 방법을 거듭 수정하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현지적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는 ‘황당한’ 주장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현지학자들은 물론이고 같은 시기에 조사를 온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과출신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학제적 기풍이 더욱 강화되고 지구적인 학술연계망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현지에 개인으로서 살면서 심신을 보전하면서도 가능한 모든 연계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단순한 일상의 전통적인 ‘책상물림’이 아니라 유기적인(organic) 조사연구자로 변신하게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

이러한 3단계를 충실하게 거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역연구자로

거듭나기 어려울 것이다. 단지 현지어만 구사할 수 있다면, 단지 학위논문만 작성한다면, 단지 현지에 체류하기만 한다면, 단지 현지의 대학을 졸업하기만 한다면 지역연구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if only”식 해법으로는 지역연구자를 육성할 수 없다.¹²⁾

2. 동남아학계의 후속세대 육성모델

[표 4]는 지역전문가 육성의 단계와 그에 부합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요약한 것이다. 그 동안 10년 이상의 실천으로 정착된 ‘동남아학계의 육성모델’은 도표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 학생에 대한 지원활동에 집중하였다. 기관별로는 한국동남아연구소가 두 번째 심화학습단계를, 한국동남아학회가 세 번째 현지조사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표 4] 지역전문가 육성단계와 동남아학계의 지원 프로그램

형성단계	‘동남아학계의 육성모델’	개선방안
관심촉발단계 (체험, 언어)	- 없음	- 동남아 전공학부 개설 - 동남아 강의 개선과 현지어 교육운동
심화학습단계 (독회, 연수)	- 초대학적 대학원생 독회(연) - 현지단기연수 프로그램(연)	- 대학원생 개별맞춤형 상담강화 - 동남아언어연구여름학교 개설
현지조사단계 (조사, 발표)	- 현지조사 지원프로그램(학) - 학술대회와 학회지 개방(학)	- 현지조사 지원금 증액 - 우수논문상 제정

주의: ‘연’은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지원, ‘학’은 한국동남아학회의 지원 프로그램.

우선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의 프로그램부터 살펴보자. 한국 동남아연구소(전신은 동남아지역연구회)는 1994년부터 초대학적으로

12) “if only” 식 해법의 비현실성은 인류학자 테드 류웰런(Ted C. Lewellen 1995)이 제3세계 문제에 관한 단순한 해법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을 빌어다 쓴 것이다.

로 대학원생들을 준회원(이전 명칭은 연구회원)으로 모집하고 대학원생들의 자율적 독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준회원 제도와 대학원생 독회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수의 대학원생들을 동남아연구자의 길로 유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14년간 이 프로그램이 배출한 동남아연구 박사가 8명, 박사과정생이 13명이며, 현재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31명의 한국학생들이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우선 대학별로 각기 산개된 대학원생들이 한데 모인다는 데서 연유한다. 대학원생들은 대학과 학문분과를 초월하여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고 책을 함께 읽으면서 다른 학문분과의 이론과 지식도 채득하고 주전공이 아닌 나라에 대한 이해도 넓히면서 동남아교육의 분절성을 극복하게 된다. 더구나 동남아강좌가 없거나 희소한 학교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모임이 아주 절실하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학생과 선생의 만남이다. 준회원들은 연구소에 가입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의 정회원들(현재 44명의 박사)과 접하게 되고 이러한 만남이 학업에 관하여 선배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모임은 대학원생들이 차후에 지역전문가로 성장하였을 때 공동 연구 및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해준다. 준회원 모임은 선출된 대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연구소가 모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하고 각종 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으로 준회원을 채용함으로써 후원하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는 동남아현지학자들의 교육네트워크인 SEASREP (Southeast Asian Studies Exchange Program)과 함께하는 단기현지연수프로그램(Advanced Seminar)을 개발하여 준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름방학 중 일주일간 동남아의 한 나라로 가서 오전에는 저명한 현지학자들의 특강을 듣고 오후에는 명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인데 매

년 선발된 7-8명의 대학원생들에게 별도의 경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몇 년 간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 관한 입문지식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³⁾

한편 한국동남아학회도 설립당시부터 후속세대를 중시하여 학회지 게재와 학술대회 발표에 있어서 박사과정생들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석사과정생까지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동남아학회의 결정적인 후속세대육성프로그램은 대학원생 현지조사지원제도이다. 학회는 석박사과정생 현지조사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마다 5-6명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논문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남아 현지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지조사 계획을 포함한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학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석사과정생은 3개월 이상 현지체류를 조건으로 미화 3천불, 박사과정생은 6개월 이상 현지체류를 조건으로 6천불을 지원받고, 유일한 의무는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제출하는 것뿐이다. 지역연구의 결정적 관문인 현지조사에 대한 후원사업은 한-아세안학술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한국외교통상부의 중개를 통하여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 한-아세안 교류기금 덕분에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와 아세안을 넘나드는 복잡한 절차를 충족시키는 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와 인내 없이는

13) 한국동남아연구소의 대학원생 지원프로그램은 동남아학계가 규모가 작고 지방생이 적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마술’이었다.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미국의 노장학자 윌리엄 리들(William Liddle)은 한국에서 동남아지역연구회 학자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전국에서 모인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 거의 전부가 조그만 식당에 앉아서 불고기를 같이 먹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전공분야, 지역, 학교를 초월한 연대성, 대학원생들도 동료로서 대하고 다른 학교의 학생도 자기 학생처럼 아끼는 개방성은 한국의 동남아 연구자들이 외로운 소수자들이라는 약점 덕분에 생성된 기풍이다.

지속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프로그램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도 추진되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정권교체로 중단되었다.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에 운영을 맡겨서 추진되었고, 해마다 2억씩 투자하여 20명 내외의 박사과정생을 세계 각지로 현지조사를 보내던 야심찬 기획이었지만, 외환보유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중단된 이후 지역연구 관련 학회들이 단체로 교육부에 청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되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지역연구 관련단체들의 청원에 대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인력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답변을 주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비를 1년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었다. 현지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지역연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전제성의 경우처럼) 연구비를 현지조사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마저도 지난해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동남아학회 현지조사 지원사업이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일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점에서 과거의 교육부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박사과정생뿐만 아니라 석사과정생도 지원하는 ‘조기교육’ 프로그램이고, 또 지원금 감소와 영주권자 우대정책으로 인해 갈수록 소외되는 한국인 유학생들까지도 지원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한국 동남아학계의 후속세대 육성모델은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준회원 제도와 한국동남아학회의 석박사과정생 현지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며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하여 지난 10여 년간 신진연구자들을 후원하여 동남아연구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남아학계가 대학원생 지원에 집중하다보니 학부

를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소홀하였고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도 심화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V. 개선방안

1. 관심촉발단계

(1) 동남아전공 학부의 개설

연구를 지망하는 학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원 중심의 육성전략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지역전문가 육성의 첫 단계는 관심 유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부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이다. 동남아 강좌의 희소성, 분절성, 편중성을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학부에 동남아지역전공을 창설하는 것이다. 학부제의 장점을 이용해 전공을 창설했던 인류학자들이나 여성학자들의 실험을 선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명칭은 ‘동남아문화전공’도 좋고 중국연구자와 일본연구자와 연대하여 ‘동아시아학부’를 만들고 그 산하에 ‘동남아전공’을 만드는 큰 사업 구상도 좋다.

지역연구전공학부의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학과 분절적인 체제보다 더 유연하게 학생들의 선호와 사회적 수요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언어 등에 관하여 교수의 역량과 학생의 관심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정 편성할 수 있으며 역내의 소수언어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10여년이 지나면 동남아연구전공의 학생모집 전망도 밝다. 그 때가 되면 ‘다문화가정’에서 동남아출신의 어머니로부터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동남아의 언어와 동남아에 관한 관심을 물려받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시작

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⁴⁾

(2) 동남아강좌의 개선

개인적인 해법은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은 동남아에 관한 학부과목을 개설하고 내용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강좌의 개설뿐만 아니라 생존이 중요하다. 수강생을 끌어들이고 자극하기 위해서 동남아 지역연구자들끼리 강의 경험을 나누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해야 한다. 기존에 추진된 몇 가지 사례를 토론용으로 아래에 제시해 보았다.

- 지역 확장 강좌: 동남아를 과목명에 포함시켜 선명하게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더 포괄적인 과목명을 내걸고 내용상 동남아 지역연구 교육을 가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동남아 강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대학에서는 동남아연구자들이 과목 명칭으로 ‘동아시아’, ‘아시아’, ‘제3세계’ 같은 확대된 지역범주를 사용하거나 ‘지역연구’라는 일반과목을 개설하여 동남아사례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 우회로를 모색해 왔다. 이를테면 전북대는 동아시아로, 성공회대는 아시아로, 강원대는 제3세계로, 영남대는 지역연구라는 명칭으로 동남아지역학을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로 확장된 지역연구 강의는 적어도 두 가지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동아시아지역협력의 심화

14) 미국의 경우 동남아 이주민 자녀들 덕분에 학부의 동남아관련 강좌가 성황을 이룬다고 한다. 대표적인 동남아역사학자 앤소니 리드(Anthony Reid)는 동남아출신의 부모로부터 “말을 물려받은 이들”(heritage speakers: 회화가 가능하나 쓰는 법은 모르는 이들이) 언어를 더욱 연마하고 부모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의 동남아강좌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Southeast Asia Program 1999, 38),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장수의 장날은 동남아다’라는 말은 전북의 농촌에 동남아 출신 새댁들이 많고 활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들이 장날을 변모시켰다면, 그 아이들은 대학을 변모시킬 것이다.

추세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대세를 장악한 동북아 중심의 동아시아관에 대한 ‘진지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 지역 심화 강좌: 확장 전략과 반대로 축소를 통한 심화 전략도 구상될 수 있다. 동남아 연구자들마저도 동남아 10개국을 모두 다루는 동남아강좌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동남아연구소에 소속된 28명의 전임교원 중에서 7명이 동남아강좌를 개설하지 못했으며,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라는 우회적 명칭의 과목도 개설하지 못한 이가 4명이나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남아 강의란 보통 한 나라의 특정주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동남아연구자에게도 버거운 강의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동남아의 한 나라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외대를 비롯한 어학과를 개설한 대학에서만 동남아의 한 나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강좌가 개설되어 왔고 다른 곳에서는 감히 그럴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서울대 학부에서 [말레이인도네시아 언어와 문화] 강좌를 개설한 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 참여형 강좌: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동남아정치의 이해]는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동남아언어 관련 학과가 아닌 곳에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사례이다.¹⁶⁾ 우선 풍부한 사진자료와 영화를 통해 학생들의 일차적 흥미를 유발하였고, 강의의 전반부를 한국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 즉 베트남 전쟁, 한국인의 동남아투자, 민주화운동 같은 주제들을 배치하였으며, 이어서 학생들이 조별로 배낭여행 계획을 짜서 발표하는 가상체험 시간을 가졌

15) 강원대의 박사명 교수(Park 2008)는 최근에 동아시아연구네트워크(NEAS: Network for East Asian Studies)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 동아시아 과목의 의의와 교안에 관한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16) 서강대 학사지원팀이 제공한 정보(2006년 11월 13일 이메일)에 따르면, [동남아정치의 이해] 강좌는 2003년까지 20명 내외의 소규모 강좌였다. 그런데 2004년 1학기에 갑자기 72명으로 수강생이 급증하는 기현상이 연출되었다.

다.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파워포인트를 제출한 팀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가 대단하였다. 끝으로 국가 개황, 각국의 선거와 정당 체계에 관하여 조사발표하게 함으로써 일차적 관심과 흥미를 각 국가에 대한 정보와 전공 지식으로 연결 심화시키는 과정을 거쳤다(신윤환 2004). 이 강좌의 성공은 학생 참여형 설계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흥미유발, 가상체험, 정보수집, 전공연계 글쓰기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의 성공으로 보인다.

- 다문화 동원형 강좌: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개설한 [동남아 문화의 이해]는 꾸준히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인데, 깔끔한 정리와 요약 보다는 동남아의 다양성과 화려한 분산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공한 과목이다. 교재 없이 강의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담당교수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들을 강조하고 생소한 지명과 종족이름을 외우게 하였다. 수강생에 따르면 동남아에 흠어져 사는 사람들의 신기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와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 하는 흥미가 생겼고, 종족균열에 대한 이야기는 산업균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제영역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동남아의 음악과 무용에 관한 시청각자료를 보여주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특강시간도 마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동남아연구에 대한 욕구를 자극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의 적실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강좌개설운동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동남아언어교습운동

현지어 학습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남아 지역연구는 멀고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반면에 현지어를 배워본 학생들은 반대로 느낄 것이다. 현지어 능력은 지역전문가의 필수요건이므로 빨리 익힐수록 좋다. 그러므로 현지어강좌를 개설해야 하고, 만약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현지어학습동아리’나 ‘현지어여름학교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현지어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교육방송에서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회화 강좌가 개설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한국교육방송 2008), 동남아의 다른 언어강좌로 확대되도록 방송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 동남아언어 강좌 개설: 서울대의 경우처럼 전국의 주요대학교에서 학부과목으로 동남아의 언어와 문화를 섞어서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말레이인도네시아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동티모르, 태국남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그 통용범위가 넓어서 다가올 ‘동아시아공동체’의 공용어로 삼자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로 중요한 언어라는 점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신윤환 2008b). 그리고 베트남어는 한국의 외국인 신부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베트남 어머니들을 생각하여 두 번째로 중요한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강의할 수 있는 박사들은 동남아 언어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를 먼저 교섭하여 개설을 약속받은 다음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동남아어 학습동아리: 대학 사정이나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강의가 개설되기 어렵다면 동남아 연구자들이 과외활동으로 현지어 교육을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교수가 직접 나서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을 모집하여 동남아출신 유학생이나 신부에게 강의를 맡기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학습동아리로 묶어주면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¹⁷⁾

17)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는 2006년 2학기부터 ‘서바이벌 인도네시아어’라는 명칭으로

- 동남아어능력검증시험제도: 한국동남아학회가 동남아언어능력 검증시험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동남아 언어를 학습하려는 학생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졸업조건으로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대학들을 상대로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언어능력도 영어능력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좋고, 입학할 때 동남아언어 능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체험을 권장하는 지도

미국의 저명한 동남아연구자 제임스 스캇(James C. Scott)은 동남아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현지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문화에 매료 되어 연구에 입문한 공통적인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Southeast Asia Program 1999: 38). 현지 체험과 지역연구 동기화의 밀접한 상관성에 착안하여 우리도 학생들에게 강의실 밖의 다양한 현지 체험 프로그램들에 참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양한 현지 체험 지원프로그램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재단, 사회단체,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국제협력단 국제협력인턴십, 해외인터넷청년 봉사단, 세계청년봉사단, 태평양-아시아협회 청년봉사단,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여성인턴 프로그램, 대학별 국제화프로그램(해외인턴십, 해외자원봉사, 세계교육기행) 등을 활용할 만하다. 그런데 동남아 문화는 반드시 현지에 가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아시아연대를 표방하거나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여성 문제를 전문으로 삼는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하면 동남아인들을 접하고 그들로부터 현지문화와 현지어를 배울 수 있다. 국내에서 체험하는 동남아는 현지에서 체험하는 동남아와는 또 다른 성찰과 발견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초급인도네시아어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학기마다 5-10명의 학생들이 간단한 문법과 회화를 배웠고,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이나 유학생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중급 강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심화학습과 현지조사단계

(1) 대학원생 맞춤형 지도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준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생 독회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원생들의 선호에 따라 ‘지도위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준회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학위논문계획서 작성, 현지조사 준비, 논문집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로 한다. 연구소 차원에서 이러한 상담을 가장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정회원을 정해주면 대학원생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에게서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 규모가 작은 그룹이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구자 개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 동남아언어연구여름학교

현지어 학과가 없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중급 이상의 현지어가 교습되기 어렵고 그런 정도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규합하여 현지어를 집중 심화 학습하는 여름학교를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해 볼만 하다. 미국의 대학들은 1983년에 동남아연구여름학교(SEASSI: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2008)를 창설하고 동남아언어를 배우려는 대학원생들을 한 곳에 모아 8주간 교습하는 프로그램을 12개 대학이 콘소시엄 형식으로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개설하고 있다. 2008년에는 9개 언어에 대한 강좌들이 개설되었고, 전통 음악 공연, 영화 상영, 전문가 특강, 시낭송의 밤, 학생발표회, 전공대항 배구대회 같은 프로그램도 병행되었다. 이러한 여름학교는 한국동남아학회가 연구 검토하여 도입해볼만한 프로그램이다. 하나의 언어만 선택하여 집중심

화학습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호주의 머독대학교가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학습을 위한 호주콘소시엄(ACICIS: Australian Consortium for 'In-Country' Indonesian Studies 2008)이 참조할만한 선례가 될 수 있다.

(3) 현지조사 지원프로그램 강화

한국동남아학회의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프로그램은 동남아연구 후속세대 육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한국의 어떤 학계나 재단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동남아학계의 독보적인 프로그램이므로 한국의 지역연구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지속되고 홍보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프로그램 창설 이래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아서 비현실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항공료 인상과 현지물가 상승추세를 고려해야 한다. 석사과정생은 3개월, 박사과정생은 6개월 이상 현지조사를 할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인데 요즘 박사과정생들은 보통 1년 정도는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추세를 볼 때 역시 현재의 프로그램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지원금을 인상해야하고, 지원금의 평준화가 아니라 최대액수만 정하고 지원자가 계획한 연구기간을 반영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지조사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심사하여 우수한 논문을 학회장 명의로 포상하고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학생들의 연구비는 회수하는 식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지원금 증액을 위한 재원 보장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의 지역연구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연구지원 관련 재단들(한국학술진흥재단, 포스코청암재단, 서남재단 등)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현지조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설득작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설득과정에서 외국의 모델이 필요하다면 미국사회과학위원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008)의 IDRFI(International Dissertation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75명의 박사과정 생들을 선발하여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해외현지조사지원금을 약2만불씩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각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현지조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연구를 지망했던 한국인 유학생들(김지영, 김용진, 여운경, 정은숙, 이상국, 황인원)에게 문의한 결과, 하버드대, 시카고대, 워싱턴대, 위스컨신대, 싱가포르국립대, 호주국립대 등의 대학들은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하버드대가 박사과정 현지조사비로 최대 2만5천불, 시카고대와 호주국립대는 최대 1만불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프로그램 사례들을 연구지원 관련 재단들과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VI. 결 론

동남아지역의 연구와 관련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은 ‘요구가 많은데 사람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답답하고 피로한 개인적 경험이 이 논문 집필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박사 후에 교육활동에 관한 고민이 늘어난 점 역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미국 사회과학위원회의 동남아프로그램이 주관하고 지명한 동남아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후속세대 육성방안까지 토론한 좌담(Southeast Asian Program 1999)도 우리를 자극하였다. 지금까지 펼쳐본 길고 난잡한 이야기의 결론은 ‘열심히 공부하자’, ‘잘 가르치면 된다’는 식의 처방을 넘어서 후속세대를 위한 교육과 지원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토론을 전개하고, 나아가 일

종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이 그런 ‘토론’과 ‘운동’의 형성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 동남아학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몇 가지 점에서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예전만 못한 미국의 동남아연구와 다르다. 미국에서는 동남아연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세대의 노령화와 은퇴, 지구화에 따른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축소(McVey 1998), 정치학의 편협한 ‘경제수학화’ 경향으로 인해 동남아연구의 위축과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본래의 지리적 근접성에 더하여, 동남아이주민의 장기적 공존, 동남아여행의 증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심화, (동)아시아 연대 담론의 확산 덕분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일로에 있으며, 지역연구에 대한 정치학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인류학이 동남아연구의 새로운 기수로 등장하고 있어서(오명석 2007) 동남아연구의 발전에 유리한 학문적 조건도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동남아연구 “제3세대”의 등장으로 소장학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전제성 2006b), 앞으로 연구와 교육에 집단적인 노력을 지속한다면, 십여 년 내로 한국에서 동남아연구의 황금기가 도래하고 한국의 동남아학계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에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위상을 지닌 또 하나의 연구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역연구 교육과정과 후속세대육성은 동남아연구자들만의 고민은 아니다. 이 논문이 지역연구자 육성을 고민하는 정부, 재단, 다른 지역을 연구하는 학회 관계자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른바 ‘특수지역’이나 ‘소외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을 연구하는 소수자집단은 ‘동남아학계의 모델’에 주목하길 권하고 싶다. 동남아학계는 작지만 견고한 후속세대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꾸준히 운영해왔다. 본문에서 많은 아쉬움을 피력하였지만 초대학

적 대학원생 독회 지원과 현지조사 지원제도 만큼은 확실하고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해왔다. 물론 다른 지역을 연구하는 그룹들도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한 성과와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 경험과 지혜가 글로 정리된다면 우리도 그들로부터 기꺼이 배우게 될 것이다.

주제어: 동남아 지역연구, 해외지역연구, 지역연구자, 현지조사, 국제대학원, 한국동남아연구소, 한국동남아학회

참고문헌

- 김도희. 2006. “한국의 중국연구: 시각과 쟁점.” 『동아연구』 50.
- 김영애. 2007. “한국동남아학회의 ‘동남아 어문학연구’ 15년을 돌아보며.” 한국동남아학회. 『1990년대 이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성과: 회고와 성찰』.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김이선. 2007. “‘가족’으로 만난 동남아 여성과 한국인 간의 젠더전쟁.” 한국동남아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춘진. 2006. “2006년 10월 17일자 보도자료”. 김춘진 의원 웹사이트.
- 박번순. 2007. “한국경제학과 동남아 연구.” 한국동남아학회. 『1990년대 이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성과: 회고와 성찰』.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이매진.
- 박승우. 2008. “한국의 동남아시아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분석.” 한국동남아학회. 『한국 동남아연구의 새로운 지평』.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법무부. 2007.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통계자료” <http://www.immigration>.

go.kr/HP/IMM/imm_06/imm_6050_200712.jsp.

- 배궁찬. 2007. “한국의 정치학과 동남아 연구: 국제관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동남아학회. 『1990년대 이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성과: 회고와 성찰』.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신윤환. 2004. “동남아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동남아 강의 개선방법에 관한 하나의 제안.” 한국동남아연구소 월례연구발표회 (8월).
- _____. 2008a.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탈동북아중심적 관점.” (원본은 2005년 5월에 한국동남아연구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 _____. 2008b.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동아시아공동체의 공식 언어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편. 『우리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해피스토리. (원본은 2005년 1월 30일에 “동아시아공동체 정체성함양 워크샵”에서 발표된 글을 서지원이 번역한 것).
- 여성가족부. 2006. “결혼이민자 국적별 체류현황,” http://www.mogef.go.kr/dev/info/ke0101.jsp?menuID=ke0101&mode=view&pidx=30&dept_code=(검색일: 2006.11.06).
- 유장희. 1997.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전문가 훈련 및 양성 전략.” 『국제지역연구』 1(1).
- 이재현. 2007. “마하띠르와 김대중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상 비교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7(2).
- 장세길. 2008. “친선교류에서 지방외교로: 전라북도 사례로 본 지방외교의 형성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16(1).
- 전제성. 2006a. “동아시아연대운동의 현황과 전망.” 서남포럼 2006 공개토론모임 자료집. 『동아시아 연대운동의 현황과 전망』. 서남재단.

- _____. 2006b.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호.
- _____. 2008. “대상에서 주체로! 아시아이주민의 위상전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편. 『우리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해피스토리. (원본은 『열린전북』 2006년 10월호에 발표된 글).
- 정유경 · 이창규. 2007. “‘변곡점’ 위의 ‘3.5세대’, 동남아교육환경을 말하다.” 한국동남아학회. 『1990년대 이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성과: 회고와 성찰』.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오명석. 2007. “한국의 인류학과 동남아 연구(개괄).” 한국동남아학회. 『1990년대 이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성과: 회고와 성찰』.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이성형 · 전제성 · 김용복. 2004. 『한국의 해외지역연구의 실태와 과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2006. “ODA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는가?” <http://www.peoplepower21.org>.
- 최병욱. 2007.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 30년.” 한국동남아학회. 『1990년대 이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성과: 회고와 성찰』.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한국교육방송(EBS). 2008.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첫걸음』, 『베트남어 첫걸음』, 『태국어 첫걸음』. <http://www.ebslang.co.kr/ebs/flz.AlcCourseViewList.laf?clscd=400000000> (검색일: 2008.08.04).
- 한국수출입은행. 2006. “국가별 해외투자현황.” http://www.koreaexim.go.kr/kr/oeis/m03/s01_0401.jsp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6. “지방자치단체 국제자매결연 현황.”
- Australian Consortium for 'In-Country' Indonesian Studies. 2008. “What

- is ACISIS.”<http://www.murdoch.edu.au/acicis> (검색일: 2008.08.04).
- Bates, Robert. 1997.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 A Useful Controversy?"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0(2).
- Crouch, Harold. 1985. *Economic Change, Social Structure and the Political System in Southeast Asia: Philippine Development Compared with the Other ASEAN Countries*. Singapore: ISEAS.
- Diamond, Larry. 2002.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13(2).
- Geertz, Clifford. 1970.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rdon, Alec. 1997. “유럽 대학의 지역학 교육.” 『국제지역연구』 1(1).
- Islam, Iyanatul, and Anis Chowdhury.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Post-Crisis Deb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son, Chalmers. 1997. "Preconception vs. Observation, or the Contributions of Rational Choice Theory and Area Studies to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0(2).
- Jones, David Martin. 1997. *Political Development in Pacific Asia*. Cambridge: Polity Press.
- Lewellen, Ted C. 1995. *Dependency and Development: An Introduction to the Third World*. Westport: Bergin & Garvey.
- Lijphart, Arend. 1995. “비교정치연구와 비교분석방법”, 김웅진, 박찬욱, 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 강의 1: 패러다임과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 McVey, Ruth. 1998. “Globalization, Marginalization, and the Study of Southeast Asia.” Craig J. Reynolds and Ruth McVey. *Southeast Asian Studies: Reorientations*. The Frank H. Golay Memorial Lectures 2 and

3.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 Nabers, Dirk. 2003. "The Social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Case of ASEAN+3."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3.
- Park Sa-Myung. 2008. "Curriculum Development on East Asian Studies: The Case of Korea." Paper presented to A Workshop on "Curriculum Development on East Asian Studies", Network for East Asian Studies (NEAS). March 10-11.
- Pye, Lucian W.. 2001. "Asia Studies and the Discipline."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4(4).
- Sartori, G.. 1995. "비교정치에 있어서 개념형성 오류", 김웅진. 박찬욱. 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 강의 1: 패러다임과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 Scott, James C. 김춘동 역. 2004. 『농민의 도덕경제: 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 아카넷.
- Shin Yoon Hwan and In-Won Hwang. 2004. "Settings for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Korean Studies in ASEAN and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Universitas Sains Malaysia, Penang, Malaysia, June 15-16.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008. "International Dissertation Research Fellowships." <http://programs.ssrc.org/idrf/> (검색일: 2008.08.04).
- Southeast Asian Program,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99. *Weighing the Balance: Southeast Asian Studies Ten Years After*. New York: SSRC.
-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2008. "SEASSI 2008." <http://seassi.wisc.edu/> (검색일: 2008.08.04).

(2007. 11. 20 투고; 2008. 2. 11 심사; 2008. 8. 5 게재확정)

Abstract

Education Process and a Model for Reproducing Southeast Asia Area Specialists in Korea

JEON Je Seo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LEE Jaehyon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surveys current curriculum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and suggests an ideal model for reproducing area specialist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Southeast Asia for Korea in economic, diplomatic and social aspects and analyses the current curriculum of Southeast Asian studies at the levels of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particularly focusing on graduate schools of international studies. We found out that there are only a few courses on Southeast Asia at the undergraduate level in Korean universities. Those courses are not proportionately distributed to all Southeast Asian countries. Graduate schools of international studies, which originally intended to nurture area specialists, failed to do so. Despite these difficulties, there has been a positive sign. Such organizations as KISEAS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and KASEAS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have invested their efforts to stimulate graduate students' seminar and to support financially their fieldwork. As a result, they are growing small but strong new generation

of Southeast Asian specialists. Such efforts are positive, but not enough.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number of courses on Southeast Asia, to strengthen the existing courses, to train students with local languages and to widen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experience the field. The efforts made by Southeast Asia area specialist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combined with the fast growing interests in Southeast Asia, will brighten the future of Southeast Asian area studies in Korea.

Keywords: Southeast Asian Studies, area studies, area specialist, fieldwork, graduate school for international studies, KISEAS: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KASEAS: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